

“1990년대 일본의 재정정책과 시사점(김성태), 재정정책의 평가에 대한 논의(박기백)”에 대한 토론

토론자: 이철인

I. 배경

- 경기침체 및 저성장에 따른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
- 기간간 변동성 및 대체성을 민감히 고려하는 금융 정책
- 이와 달리 재정정책의 경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행위의 인센티브를 결정
- 운용기조와 장기적 방향에 대해 보다 고민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영역

II. 요약

- 사례분석을 통한 접근(김성태); 재정전반에 관한 문헌을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근거 모색 (박기백)
- 두 논문 모두 공통적으로 조세제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대응 평가
- 재정운용 평가에 있어서 다소 차이

II. 요약 - 계속

- [1] 소득세제의 강화; 재산관련 세제 또한 강화; 사회보장 기여금 증대; 소비세제는 유지 또는 소폭 하락 → **재분배 구조 정립에 기여**; 선진국들의 세제와 내용면에서도 근접!
- [2] 지출/세출에서 복지/경제/기타 공공행정 순 구조 확립 → **재분배뿐만 아니라 사회선호에 부합한 지출** vs. 일본과 유사한 구조 ...
- [3] 재정의 **경기대응적** 운용; 부채비율 면에서 소폭증가 내지 유지; 그러나 복지부문(예: 기초연금, 영유아보육) 항구적 증가에 걸맞는 증세가 병행되어야 함

IV. 질문 및 코멘트

- 전반적으로 사회선호의 반영, 재분배, 거시적 안정성 면에서 **기본충족**; 큰 오류는 찾기 어려움. 그러나
- 일본의 재정과 비교: 주요 이슈로서 고령화, 자산버블, 정치경제의 **세가지**가 맞물려 장기 침체와 재정상황 악화 초래
- 재정지표의 개선이 장기침체 억제 등의 결과를 유도하는 "**필요충분조건**"이 되지 못함

IV. 질문 및 코멘트 - 계속

- 재정정책이 **재정건전성유지하**에서 단순히 복지팽창에 따라 소득재분배적 세수확충을 하는 경우
- 균형예산제약하에서 조세의 존재는 **multiple equilibria** 초래 (저 세율 - 고 소득; 고 세율 - 저 소득) (uribe, '97)
- 성장잠재력 확충없이 복지확충만을 목적으로 하는 세 부담 증가시 재정건전성하에서 **오히려 장기침체도 가능**
- 기타 SOC 투자 및 공공안전 관련 **사회투자 위축도 가능**

IV. 질문 및 코멘트 - 계속

- 재정정책의 **시야확대** 및 재정개혁의 필요성:
세입-세출, 단순히 공공부문의 축소보다는
“경제활력”을 촉진하거나 적어도 유지하면서
복지 및 재분배를 추구해야 ...
- 재정정책이 “일자리 창출/ 공기업 구조 개편/
중소기업 혁신/ 창업” 등 장기적 자원배분효
율성 제고 및 잠재력 확충에 기여해야
-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의 실효
성 등에서 의문시 ... e.g., 반값등록금 ?

IV. 질문 및 코멘트 - 계속

- 이러한 부문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**활력추구** ➔ **일본화** ...
- 향후 재정정책 평가지표에서 이처럼 재분배의 추구와 **상응하는 활력추구 수단을** 제시하는지 점검해야...
e.g., 복지확충의 내용을 근로조건부 중심으로

IV. 기타 comments

- 재정지출의 분류체계: 복지, 경제, 공공행정 → 동시에 근로/경제활동 조건부 지원, 무관한 지원, 비근로 조건부 지원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 고려
- 지출구조의 일본과 유사성: 선진국들에서도 관측
- **복지확충과 통일시 대비:** 통일시 북한주민에게도 허용되는 구조를 고려해야
e.g., 소비세율 인상 미루듯, 복지제도의 내용 및 수혜조건도 현재의 경제및 미래상황도 고려해야 ...